## 이덕일의 '역사의 창'

# 남원이 기문가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 가야사를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이 나라 역사학계를 장악한 강단사학자들의 풍토로 봐서 자칫 일본 극우파들의 임나일본부를 끌어들이는 선전장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니나 다를까 2019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본성'(加耶本性) 전시회는 이런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임나일본부설을 버젓이 끌어들인 것이다.

이 전시회의 연표 설명 중에는 "369년, 가야 7국(비사벌, 남가라, 탁국, 안라, 다라, 탁순, 가라), 백제·왜 연합의 공격을 받음(서기)"이라는 대목이 있었다.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말한 '금관·아라·고령·대·성산·소가야'의 가야 6국은 모두 사라지고 엉뚱한 가야 7국의 이름이 나열되었다. 이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경전인 '일본서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일본서기는 서기 369년 야마토왜의 신공(神功)왕후가 "비사벌, 남가라, 탁국, 안라, 다라, 탁순, 가라 7국을 평정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이 고대 야마토왜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를 설치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핵심 내용인데,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고를 들여 선전했던 것이다.

백제 멸망 약 60여년 후인 서기 720년에 편찬한 일본서기는 일부러 거짓말하기로 마음먹고 쓴 역사서로 유명하다. 역사서의 기초인 연대부터 맞지 않는다. 야마토왜(大和倭)는 빨라야 3세기 말에 시작하는데 일본서기는 그보다 1천여 년 전인 서기전 660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려 놨으니 연대가 맞을 리 없다. 또한 백제의 제후국이었던 야마토왜를 상국(上國) 즉 황제국으로 조작하고,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를 모두 야마토왜의 속국으로 격하시켰다.

그래서 메이지(明治) 이전까지는 일본인 학자들도 일본서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통감' 같은 한국의 역사서와 비교해서 맞는 것만 인정해 왔다. 그러다가 조선총독부에 근무했던 경성제대 교수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삼국사기는 가짜고 일본서기가 진짜라고 우겼는데 이 억지가 조선총독부의 적극 지원으로 힘을 얻었고 아직도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은 '삼국사기 불신론'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방 후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수회에서 일본인 상전들의 칭찬을 받으며 한국사를 깎아내리던 이병도·신석호 등이 남한 강단사학계를 장악하면서 지금까지 이 분야는 친일청산의 무풍지대가 되었다. 그러나 차마 일본서기까지는 내놓고 인용하지 못했는데, 해방 70여 년이 넘도록 단죄되기는커녕 막강한 친일 카르텔에 의해 주류 행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서기를 공개적으로 칭송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인제대 교수 이영식은 "현대적 국가 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서기로 돌아가는 일이다. … 일본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중요하다"(강만길 외 지음, '우리 역사를 의심한다')라면서 일본서기의 시각으로 한국사를 바라봐야 한다고 선언했다. 일본서기의 시각으로 보면 고구려·백제·신라·가야는 모두 야마토왜의 속국이 된다.

1895년 경복궁 담을 넘어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던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이라는 낭인 야쿠자가 있었다. 그는 '일본서기 조선지명고'에서 임나가 경상남북도뿐만 아니라 충청·전라도까지 차지했다고 우겼는데, 이 주장에 지금 막대한 대한민국 국고가 쓰이고 있는 중이다. 앞의 이마니시 류는 '기문·반파고'(己汶伴跛考, 1922)에서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문(己汶)을 전라도 남원이라고 우겼는데, 현재 남원에서 '기문가야'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기문가야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일본 극우파들은 욱일기를 휘날리며 축하 파티를 벌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에 내몰리고, 식량 부족으로 북한 형제들의 기아 사태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을 악용해 이런 작태를 버젓이 자행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만일까?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 社說

# 시내버스 기사들 적정 휴식 시간 보장해야

광주 지역 시내버스 기사들이 과로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노동 여건 때문인데, 이로 인해 시내버스 서비스 질이 저하되면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도심에서는 지난해 지하철 2호선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버스전용차로가 사라지고 교통 정체로 인해 차량 운행 속도도 상당히 늦어졌다. 하지만 시내버스 회사들이 정해 놓은 버스 배차 시간은 예전 그대로여서 기사들은 휴식 시간은커녕 대소변까지 참아 가며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실정이다.

광주일보는 지난 20일 수완 03번 시내버스에 탑승해 운행 실태를 직접 살펴보았다. 버스는 오전 7시 10분 송원대를 출발했지만 첨단지구의 마지막 정거장에 다다른 시각이 빠듯했다. 이 때문에 운전기사인 송연수 씨는 차고지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급히 해결한 뒤 곧바로 버스를 돌려 다시 운행을 시작해야 했다. 송 씨는 "조선대, 산수오거리, 교대 등 지하철 공사 구간에서는 정체가 심해 가다 서다를 반복하지만 회사가 정한 운행 시간은 110분 그대로여서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때문에 꼬박 1시간 50분 동안 허리 한 번 못 펴고 운전대를 잡을 때가 많다는 것. 이런 열악한 노동 여건은 비단 송 씨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버스 기사 2460명 대다수가 겪고 있으며, 당연히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승강장 통과 137건, 불친절 64건, 승하차 거부 75건 등 321건이나 됐다.

지난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버스 회사에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의 노동 여건이나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해 해 사고와 불친절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기사들의 적정 휴식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여기에 시는 버스 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근로 여건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대형트럭 사고 같은 곳에서 두 번이나 났다면

여수시 서교동 한재 사거리에서 그제 오전 9시께 승용차 운반용 대형트럭(자동차 탁송차량)이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근로에 나선 70~80대 노인들이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 탁송차량은 한재터널에서 한재사거리로 가는 내리막길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행인들을 치고 승용차 10여대를 추돌하고서야 멈췄다.

여수 경찰은 사고를 낸 탁송차량의 고박 상태와 과적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또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탁송차량의 브레이크 파열 및 불법 차량 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각각 검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4.5t 트럭이 도로를 역주행해 도로변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바로 옆 건물에 부딪친 것이다.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트럭운전사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차량이 없는 반대 차선으로 차를 몰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두 사고 모두 브레이크와 관련이 있지만 완만하지 않은 내리막길이라는 도로의 구조적 문제와 불법 개조나 과적 등과 같은 대형 트럭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 의혹도 제기된다. 여수 경찰과 여수시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거듭되는 대형 화물 트럭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개조, 과적, 과속부터 엄정하게 단속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여수 한재사거리 사고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 운행을 염두에 두는 대형 트럭 운전기사들의 교통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 기 고

# 징세행정에서 더 나아가 복지행정 지원까지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올 여름 장마는 전국 곳곳에 거센 빗줄기를 뿌리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긴장시켰다. 하지만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철 폭우와 태풍도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세청은 공적인 보호 체계의 하나로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 향상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도입해 집행하고 있다. 이후 2015년에는 '근로·자녀 장려금'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2019년부터는 반기 신청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한발 빠른'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꾸준한 제도 확대를 통해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2만 가구에 6484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세정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코로나19 등 갑작스런 재난으로 일자리를 잃는 등 경제·사회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추진 중이다. 일하는 모든 국민들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는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소득 파악이 우선이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전제 요건인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 준비단' 출범 이후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전국 7개 지방청과 130개 세무서에 소득 자료 관리 전담팀을 설치하고 계획 수립과 신고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해 이달 소득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월 수집할 예정이다.

소득 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단축됐다고 사업자나 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주기를 단축하면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소득 정보가 빠르게 파악돼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은 한층 두터워질 것이다. 다만 소득 자료 제출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생업에 여념 없는 사업자들의 번거로움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축된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영세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제출 도움 창구도 운영할 방침이다. 보다 쉽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 간편 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제출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실시간 소득 파악은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수집되는 소득 자료는 고용보험 확대와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 지원에 활용될 소중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홈택스 도입, 현금영수증 제도의 조기 정착 등 세금 징수 기관에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혁신을 거듭해 온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인 '근로·자녀 장려금'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징세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 시대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다.

## 의료칼럼

# 코로나 우울과 정신 건강

추일한
조선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겨 발생한 우울감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8월 새말모임을 통해 '코로나 블루'의 대체어로 '코로나 우울'을 선정하였다.

최근 한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환자에서 우울증 발생률이 25~35%로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감염 질환에서 우울증 발생 위험도는 감염 질환의 심각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각한 감염 질환을 앓는 환자가 우울 증상을 보이는 시기는 1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가장 높아 코로나19 관련 우울 증상 평가와 추적 관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울증과 흔히 동반되는 불안증의 경우 최근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환자에서 불안 증상을 보인 비율이 36%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96.2%에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여, 일반인이 경험하는 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감염이 치매 및 뇌졸중을 포함한 뇌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뇌신경계 질환이 정신 증상을 동반하므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비해 우울과 불안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의 비율이 40% 정도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은 마음의 상태에 국한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태는 신체 증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목이 뻣뻣하거나 복통 또는 소화불량 등도 우울이나 불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체 증상이다. 이러한 신체 증상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하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자. 우울감은 자신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신체·사회·경제·가치 등 전체 자아(자존감)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잃어버렸을 때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우 활발하게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하던 사람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그 활동 범위가 급격히 축소되어 우울증이 발생될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다 우울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개인이 경험하는 상실의 스트레스는 같을 수 있지만 그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지지 체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하는 우울 및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고, 우울증 및 불안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우선 자신의 감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글이나 말로 표현하거나 걷기·체조·헬스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부정적 감정 상태를 극복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적당한 음식 섭취, 과음과 흡연을 피하고 지나치게 커피 많이 마시지 않기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강화하도록 한다. 잠을 자는 동안 꾸는 꿈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낮 동안 우울과 불안이 동반된 경험을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꿈을 꾸면서 긍정적인 기억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술이나 담배 사용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 음주자는 음주량이 32%, 알코올 사용 장애 재발은 19% 증가하였고 일반 흡연자는 흡연량이 20%, 담배 사용 장애 재발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음악 듣기, 샤워하기, 재미있는 글 읽기 등을 자주 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과 전화·편지·이메일·작은 선물 보내기 등으로 관계를 이어 나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리하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이 실천을 하더라도 심한 우울과 불안감에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 無等鼓

# 위로와 보상

관료들이 정부 조직을 장악한 것은 군주가 절대 권력을 가졌던 17세기 이후 유럽에서였다. 군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고용된 관료는 군대와 함께 절대주의 왕정의 양축이었다. 군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지배했던 그들은 특권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독일의 막스 베버에 의하면 근대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는 합법적인 권위이며, 이를 그대로 반영한 조직이 관료제다. 합리와 효율을 중시하는 관료제는 분업화된 전문화, 엄격한 위계 서열, 문서주의, 능력 중시 등의 특징을 지닌다. 필요한 직무에 따라 직위를 고안하고 직위 간의 위계적 서열을 미리 결정해, 누가 그 직위에 임명되어도 각 직위자는 서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여러 국가에 대의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관료는 이제 군주가 아닌 국민의 대표를 섬기게 됐다. 그 과정에서 관료들은 신분이 보장되는 데다 많은 재량권까지 주어지면서 그 부작용 역시 심각해졌다. 조직 내 칸막이를 쳐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능하며, 법과 지침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무사안일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무능력하다는 점도 곧잘 언급된다.

국민의 대표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점도 문제다. 관료 조직은 그동안의 관성대로 움직이며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면 국민의 대표는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나 과거와 차별되는 것들을 시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1820년 '4년 임기법'(공직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킴)을 통과시키는 등 엽관제 도입에 나섰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여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너무 오랜 기간 다투고 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여당과 정부가 마찰을 빚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관료가 공식석상에서 국민의 대표가 제시한 의견을 반박하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간다. 미증유의 재난을 버티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어느정도 보상이 되도록, 조속히 논란을 마무리하기 바란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4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52 | 체육부 220-0621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 | 〈FA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